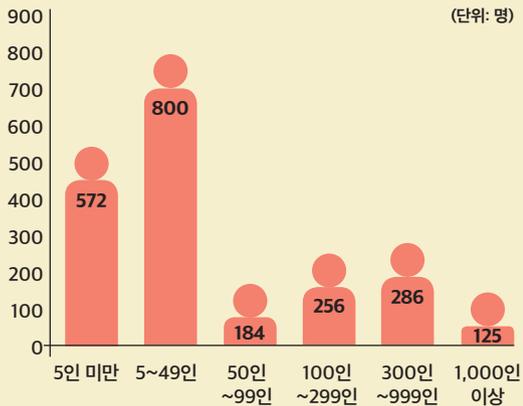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규모별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발생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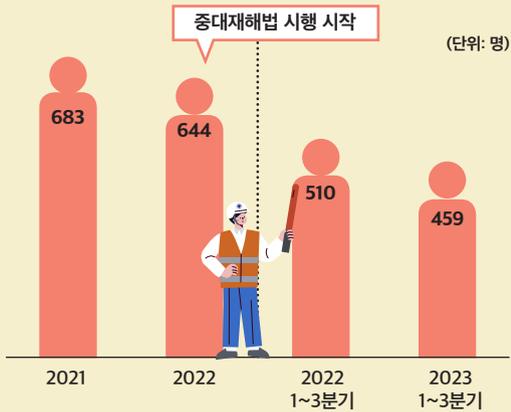
준비 미흡한 중소기업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부의 준비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92개사 대상으로 발표한 8월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가 법 시행 대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022년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확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대비 5.7%(39명), 54건(8.1%) 감소했다. 2023년 1~3분기에도 누적 사망자가 459명으로 10%(51명) 줄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아닌 위험성평가 확립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규율예방체계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사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 1~3분기 재해조사대상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감소세 보이는 산재발생률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발생률도 함께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비중은 2021년 67.8%에서 2022년 65.4%, 2023년 1~3분기 61.2%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23년 1~3분기에는 ‘추락’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대비 24명 감소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은 23명 늘어난 57명, ‘끼임’이 30명 감소한 48명, ‘깔림과 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명 감소한 240명, 제조업에서 20명 감소한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18명 감소했다. 특히 업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을 기록해 2022년 대비 41명 줄어들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0명 감소한 192명을 기록했다. 🐾